

금남로에서

박진현



올 초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신년사에서 “옛 기무사 부지에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을 대신해 서울 한복판에 ‘한국의 빌바오’ 건립을 요구해온 미술계의 오랜 숙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날 이후 ‘기무사 프로젝트’는 문화예술계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기무사 프로젝트는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상징했던 육군보안사령부(91년 기무사로 변경)가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빈 공터로 남아있던 총면적 2만7천402㎡의 서울 소격동 일대를 문화벨트로 탈바꿈시키는 국책사업이다.

‘철거’ 택한 기무사 프로젝트

그렇다고 기무사 프로젝트의 앞날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수천억 원의 부지매입비와 리모델링 예산확보는 넘어야 할 산이다. 하지만 최대 걸림돌로 예상되는 ‘건물보존’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이다.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현장’을 산 교육장

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면 자칫 장밋빛 청사진의 틀이 틀어질 수 있기에 때문이다. 실제로 이곳에는 지상 3층의 본관 이외에 강당, 연병장 등 건물 10여채가 들어와 있다.

그러나 미술인들의 우려는 기우로 끝날

문화전당을 부탁해

가능성이 높다. 근대문화재로 지정된 본관만 원형을 살리고, 나머지 부속건물은 철거한다는데 시민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같이했다. 서울의 문화지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꿈의 프로젝트’인 만큼 본관만 보존하고 나머지 건물은 사업의 ‘안상도’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까이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전시회, 공연을 통해 ‘장소’가 지닌 상징성을 기억하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서울은 지금 ‘문화광주’의 자리를 넘보는 기무사 프로젝트 구상에 한창이다. 그렇다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사업이

진행중인 광주는 어떤가. 서울이 세계문화도시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의 시계는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전당) 착공식이 열린 ‘2005년 12월7일’에 멈춰있다. 근 1년 6개월을 전당의 랜드마크로 보낸 데 이어 뒤늦게 불거진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당에 채워 넣을 콘텐츠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철거를 주장하는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보존을 요구하는 일부 5월단체들이 9개월째 힘겨투기를 하고 있는 탓이다. 그 뿐이 아니다. 별관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역사회

가 양분될 조짐이다.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2012년 문화전당 완공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사의 현안이 도청별관을 복원하자는 5월단체의 주장은 당연하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문제제기는 전당 설계안이 확정되기 전에 끝났어야 옳다. 수차례의 공청회 끝에 설계당선작이 나온 상황에서 ‘별관철거는 안된다’고 천막을 치는 것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시계 바늘을 되돌리기에 예산과 시일 등 광주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것이다. 지난 10일 도청별관에서 열린 5월단체들간의 물리적 충돌

과 관련해 “광주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며 강행공사를 강행할 생각이 결코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언은 단순한 업포가 아니다.

기억은 유적 보다 강하다

따라서 이제 광주는 싫든 좋든 ‘선택’을 해야 한다. 추진단은 무조건 밀어붙이기 보다는 대화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 5월단체는 도청 본관, 민원실 등을 핵심축으로 삼아 전당을 설계한 측면을 인정해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큰 틀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별관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추진단의 제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거장 피카소가 1937년 스페인 내전 당시 희생된 게르니카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린 걸작 ‘게르니카’를 볼 수 있는 곳은 (게르니카가 아니라)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다. 70여년이 흐른 뒤에도 게르니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유적이 아닌 그림의 힘이다. “때로 기억은 ‘보이는 것’ 보다 강하다. 오래된 것 만이 아니라 근래의 것도 유적이 될 수 있다”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의 주장은 광주가 곱씹어볼 말이다. 새로운 것일지라도 의미를 부여해 유적으로 만드는 건 우리들의 몫이다.

/*설위원 jhnpark@kwangju.co.kr

시설

여수엑스포 성공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

지난 12일로 D-3년을 맞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가 본격적인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정부는 12일 여수시청에서 ‘제4차 여수박람회 정부 지원위원회’를 열고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빠른 오는 7월부터 박람회 부지 조성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1월 박람회장 사후 활용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박람회장 부지를 ‘해양 신녹색경제 연구기술단지’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여수엑스포의 앞날은 암울하다. 당장 박람회 준비를 진두지휘할 조직위원장인 2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선장이 없는 배가 제대로 항해를 하게 될지 걱정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지지부진한 민자유치도 문제다. 지난해부터 박람회타운과 아쿠아리움, 호텔 등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박람회타운 사업자인 선정됐을 뿐이다. 여

수엑스포의 랜드마크인 아쿠아리움과 200실 규모의 콘도, 위탁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사업자는 전무하다. 게다가 박람회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내권 도로 확충도 기약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수시가 지자체 재정 여건상 자체 도로망 확충이 어렵다면 국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시내도로에 대한 국도 지원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낙담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지난 2007년 모로코와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대회유치를 따낸 만큼 여수엑스포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조직위원장 선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경제여건상 박람회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어렵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안도 필요하다. 여수엑스포 D-3년이 정부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취업 대란’ 을 하반기도 계속된다는데

‘취업 대란’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2009년 고용상황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올해 2분기 말에 경기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커 고용 부진 상황이 3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 고용 회복도 상당부분 기저효과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돼 4분기 이후의 고용 회복역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취업 빙하기’가 내년 말까지 지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자리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올해 고용 상황을 들여다보면 불황의 장기화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 조정으로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신규 채용을 아예 포기하거나 지난해보다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 대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하반기 취업시장은 아직도 ‘감감’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고용 대란이 취약 계층을 넘어 핵심 계층까지 일자리를부터 내몰고

있다. 지난 3월 중 30~40대 남성 취업자 8만9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3월 전체 취업자 수 감소 19만5천명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청년층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30, 40대 가정까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없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재추진의 원천이요,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다. 자금의 경제위기 극복도 취업 대란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도 고용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모래 위의 누각’에 불과하다. 고용안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과 가장세대의 고용대책 강도를 늦춰선 안 된다. 기업 역시 불황과 구조조정만 탓할 게 아니라 창업을 고동 분당 노력을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지난달 국회 농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농지법 개정법률안이 기막다. 개정 농지법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되는 농지에 대해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라도 농업인이 아니면 3ha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이제 넓이에 관계없이 소유가 가능하도록 빗장을 벗겨버린 것이다.

나아가 개정 농지법은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까지 한국토지공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지만, 촘촘히 들

어다보면 이 개정안은 농업인들의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진하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평균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는 20만ha, 한국토지공사가 소유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는 47만ha로 모두 67만ha에 달한다. 이

는 우리나라 농지면적 176만ha의 38%에 해당한다.

지난해 동남아 등의 곡물파동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세계 곡물 수급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더욱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7%에 불과해 우량농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 개정안은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국회의원 그

들은 수입쌀을 사먹겠다는 얘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농민의 62%가 임차농이며, 전체 농지의 42%가 임차농인 것을 감안해볼 때 상속농지의 소유한도를 폐지할 경우 지주의 일방적인 소액이 나 임대차 관계 파기

가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동과 소득보장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절대농지 해제에서부터 이번 개정안은 지켜보건대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 친 농업 정책이 과연 있거나 한지 의심스럽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농지법 소회

기고

남헌일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이제 일주일 후면 한 번의 실패 경험을 딛고 첨단산업과 문화도시가 어우러진 광주가 국제도시를 향한 발판으로 전 세계 170개국 1만 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결정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해 5월, 광주는 도전에 대한 실패도 경험했고, 그 실패를 발판삼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는 이미 4강신화를 이뤄낸 2002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간 의정으로 FISU실사단이 광주를 찾았다. 실사단을 맞은 광주 시민들의 최선을 다한 준비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가 FISU실사단 일행을 맞아 2시간여 동안 정중함 의전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작년의 중앙정부 의지와는 확 다른 입장을 보였다. 스페인버그 FISU실사단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에 감동했고, 사회

광주 시민 열정 보여주자

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와 지난 2007년 전국체전을 훌륭하게 치름으로써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되어 U대회와 같은 국제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U대회의 성공은 광주를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하겠다. 또한, U대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의 명분 하에 2015년까지는 광주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정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아 도시경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U대회를 위해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시설 확충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와 시민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각계각층에서 광주유치를 지지하고 있는 점이 광주의 큰 장점”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2015하계U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민들의 노력에 대해 FISU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상들을 상당히 수준 높게, 그리고 고귀하게 프로그램을 잘 짰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종 개최지는 오는 5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FISU총회 때 결정된다. 현재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광주를 비롯해 캐나다 에드먼턴, 대만 타이페이 3개 도시가 경쟁하고 있다. 광주가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응원의 함성이 벨기에 브뤼셀까지 전달된다면 광주 시민의 노력과 바람대로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광주에서 개최될 것이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단속 카메라 피하려 중앙선 넘는 행위 위험천만

지방공도를 달리던 중 갑자기 앞에서 가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확 하니 넘었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정상적으로 1차선으로 돌아와 달렸다. 바로 내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너무나 놀랐다.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돌아온 구간은 바로 무단단속 카메라가 과속 차량을 촬영하는 구간이었다. 무단단속 카메라 구간에는 대부분 카메라 20~30m 전방 도로 위에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루프(와이어) 방식의 감지선이 설치돼 있다. 이것은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로 차량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

는 방식으로 과속이 인지되면 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원리로 되어 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운전자가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구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 감지선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운행하다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자칫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괜히 애꿎은 다른 운전자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이런 무분별한 행동은 삼가해 주기 바란다. <▲송희경·광주시 북구 대령동

오피니칼럼

심상돈



최근 들어 과거 광우병 소고기 파동, 벨라민 함유 식품파동 때와는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탈크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석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새로운 질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탈크(Talc, 활석)는 마그네슘을 포함한 규산염 광물로, 탈크(Talcum)이라고도 불린다. 물리적, 기능적 특성을 가진 다양한 용도로 판매중이며, 유기공업, 제지산업에 이용, 의약품, 화장품 등과 보존재, 내화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활 수 있을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아직 불충분하다. 약의 생명은 진실에 대한 믿음이다. 정확한 사실에 따라 또다시 국민이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 먼저, 해당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탈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석면은 극히 적은 양인 데다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되기는 어렵다.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석면의 노출은 주로 호흡기관을 통한 노출이다. 그래서 인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탈크의 경제학

석면은 사문석이나 각섬석이 섬유 형태로 변화한 천연 광물이다.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석면 가루를 폐로 흡입하면 20년에서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중피종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져 점차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위험한 석면이 함유될 수 있는 탈크를 경유용 약의 제조 중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든다. 먼저,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탈크를 사용한 제약회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탈크는 약의 제조 공정 중 약물에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약의 표면에 묻어 있는 소량의 석면에 노출될 경우 어느 정도에서 암이 발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다. 그래서 물질의 독성과 노출되는 경로, 양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근거로 한 전문가들의 과학적 사실이 일반대중에 쉽게 먼저 알려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애꿎은 인력과 재원의 낭비만 반복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제약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 행정적인 편의대로 정해진 제약가 정책으로 싼 원료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제약 산업을 하루빨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항암제를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과동으로 지금까지의 열악한 국내여건에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국내 제약업체가 마나사냥식으로 송두리째 매도되지 않고 앞으로의 기술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광주동아병원 원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오피니상'을 수여 합니다. 오피니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오피니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차량 뒷좌석 어린이용 안전벨트 만들었으면

아이들 승용차에 태우고 외출을 할 때는 이만저만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갓난아기는 보조의자를 사용하고 8살짜리 큰애는 뒷좌석의 어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하지만, 아이가 덩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여자아이다 보니 어른용 안전벨트 때문에 목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일쑤다. 그렇게 벨트를 매다 보니 어깨 부분은 등 뒤로 넘어가고 배 부분만 벨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배 부분만 안전벨트로 조일 경우 효

과도 의문이지만 사고시 배에만 충격이 전해져서 장파열이 날수도 있을 것 같다. 자동차 충돌이나 추돌시 뒷좌석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안 띠었을 때의 안전도를 측정해 보니 안전벨트를 맨 사람이 3~4배 훨씬 부상의 정도가 낮았다. 그래서 요즘은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많이 매는 추세이다. 어린이들이 맨 수 있는 짧고 간편한 뒷좌석 안전벨트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조아·광주시 관산구 송치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淳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인)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